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선을 넘는 위원회

판단해야 할 중요한 결정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계획 재량과 판단이 중요하다. 모든 사항을 전문가 집단인 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는 개인의 학문적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법률적·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그 안건이 사회와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에 기반한 수용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부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 운영과 심의 과정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심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및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원회의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이를 재심이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

물론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단계별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한 위원회에서 다 검토한다면, 절차별로 다양한 위원회를 두는 게 무의미해진다. 결국 속상옥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각각의 위원회가 한두 명 소수의 위원에 의해 위원회 원래 목적과 취지와는 상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리고 위원회 전체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바람직한 위원회의 운영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도시계획과 개발의 수법이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사익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관심을 만들어 내고 싶은 사람들 등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의견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프레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도시나 건축 등 개발과 관련된 행위들은 약속된 일정한 절차가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예측 가능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면 모든 개발 행위에 변수로서 위원회가 등장하게 된다. 절차의 과정에서 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거쳐 상정한 안건에 대해 부정하고 다시 돌리는 것, 범위를 넘어서는 자문과 심의를 하는 것, 이는 각각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라남도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행정에서 공지하고, 심의나 자문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설 경우 행정과 위원장이 안내와 제지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바람직한 운영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광주시가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고층아파트 건설 등 도심난 개발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게 혹시 도시 관련 위원회들의 구성이나 운영의 문제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행정과 의회가 조례와 시책을 만들고 이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신발 끈을 매는 당신에게

겨우내 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눈보라가 굶고, 소나기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견뎌 내는 게지요. 그냥 피는 꽃이 어디 서던가요.

늘 유리창 앞에 서면 생각이 많아지지요. 호모니카를 불어 보거나 뜯고있던 책을 읽거나 무얼 만들어 보기도 하지요. 내가 잘못 살았나, 왜 살지? 자신에게 가혹한 채찍을 가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어디 그걸로 해소되던가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처럼 값진 일도 없지만, 과유불급, 지나침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창문 밖 풍경을 오래도록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다리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안으로 막을 기둥으로,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흘러든답니다. 꽃이 조용히 피어나듯, 과육이 안으로 익어가듯 혼자 사는 법, 세상을 읽는 내면의 눈을 뜨는 게지요.

신발 끈을 어느 정도 매셨는지요. 또 누가 자식 자랑하던가요. 캐나다도 가고 호주도 가고들 했다고요. 아들 내외가 불려서 친척이 불려서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만, 그것 역시 헛헛함의 표시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어디 그것으로 채워질 마음이라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갔겠지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것, 인간의 공허감과 허전함이라는 빈 가슴이지요. 그러나 그런 걸로 채워질 것이 아니라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아셨지요, 눈치채셨지요. 채우기보다 마음을 좁혀보세요. 내려놓아 보세요. 낮게 굽고 아래로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행복하고 충분히 부자라고 속삭여주세요. 지금도 젊고 여전히 젊다고 말입니다.

‘4촌(村) 3도(都)’라는 신조어 잘 아시고 계시지

요. 저는 ‘4생(生) 3무(無)’로 살아갑니다. 세 생각이니 사전에는 당연히 없지요. 4일은 생들과 지내고, 3일은 무생물과 논답니다. 3일 동안 산이나 들만을 걸어보세요, 사람이 그리워진답니다. 4일간만 사람과 어울려 보세요, 자연이 소중해진답니다. 그렇게 자연 속으로 사람 속으로 안겨 보세요, 아주 낮게 아래로 말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볼 필요도 없지요. 다리도 아프고 눈도 좋지 않고, 그래서 낮게 가깝게 보는 연습을 합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 우주를 보는 것은 선물입니다.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 노년에 얻은 두 번째 시각인 마음의 눈이지요. 두 번째 태어나 세상을 보는 내면의 세계, 사유의 세계이지요.

바빠서 내가 잘나서 놓쳤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젊음이 빠져나간 틈새로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지요, 경쟁하며 살다 보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이제 작은 것에 스며들어 보세요. 물결이 돌 밑으로 스미듯이, 나무뿌리가 바위 밑으로 웅크리듯이, 염색이 천에 스며들 듯이, 봉숭아 물이 손톱에 물들 듯이, 바람이 문틈으로 들락거리듯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배어들어 보세요. 사랑이란 불명은 꼭 챙기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로 걸고 있는지요. 약속도 없이 '멜ampus' 나서는 길은 아니시겠지요.

겨울 앞에서 서성거린 적이 있습니다. 유리창 앞에서 멍하니 서서 어디 갈까 망설여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그것도 오래 말입니다. 그러나 갈 곳 없이 신발 끈을 매는 이는 바로 나를 가리키겠지요.

공공의료원 설립, 시민건강권 확보 첫걸음

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타 시도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하다. 심각한 응급 상황에 대처 가능한 대형병원의 지역 편중으로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 비율'(TRI)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입원 사망률 및 응급 사망 비율 등 각종 사망 관련 지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 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본원·빛고을·치과), 시립병원(요양 2개소·정신·재활), 보훈병원 등 8개소이지만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치과·정신·요양·재활·보훈 등 특수 목적의 병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 본원 뿐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상급 의료기관으로 치료 중인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 상황에 전문적·전담적 대응이 가능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민간 의료기관 지원의 어려움, 상급병원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협조의 한계에 직면한 적이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지역 의료 인력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더라면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미래의 상황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미래를 헤아려야 한다.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은 점점 강도를 더해 가고 빈번해지는 추세다.

또한 지금 우리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1년 반을 훌쩍 넘었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시민들은 4차 재확산의 우려 속에서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높고, 신종플루보다 전파력이 뛰어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 시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한 삶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향후 광주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대응행 등에 대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의료 기본권 보장과 의료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방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경찰서나 소방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더 이상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된다.

이제 전국 광역단체 중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뿐이다. 광주시와 '울바른'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는 광주시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바로소통광주-시민에게 묻습니다'에서 참여할 수 있다. 광주의료원 설립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기대한다.

社說

기아 광주공장 주변 악취 원인 규명 나서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아(주) 광주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아측과 지자체는 점검 결과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수십건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아 광주공장 주변에서 페인트나 시너 냄새로 추정되는 악취가 풍겨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은 올 들어 광주시와 서구에 20건이나 접수됐다. 대부분 광주공장 인근에 있는 광명하이츠·한국아텔리움·모아엘가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면 냄새 때문에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주변에서 다른 악취 유발 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광주공장의 페인트 도장부를 근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악취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지난 2019년 41건, 지난해에도 35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서구는 주민들에게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시설 개선을 유도 중이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분기마다 광주공장 내 배출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복합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희석배수 법정 허용치인 500배율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아 광주공장 측도 지난 8년간 300억 원을 악취 개선에 투자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기준치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지자체나 업체는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악취가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 정밀조사부터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악취가 계속되면 주민들은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아측은 정확한 원인 규명은 물론 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솔솔’ 피어오르는 이재용 가석방·사면설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부회장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력이 크다는 얘기가.

따라서 지역경제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해 왔다. 특히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 단체들은 지난 4월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가석방 심사 기준은 복역률 60%인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당초 여론에서는 특별사면을 검토했으나,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 가석방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심사로 이뤄지는 만큼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촉구를 곤두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지역에 가전 사업의 전초기지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있고, 연관 협력업체도 300여 개나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력이 크다는 얘기가.

따라서 지역경제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해 왔다. 특히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 단체들은 지난 4월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심사로 이뤄지는 만큼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콜 불법 투약 사건 등으로 또 다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사법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단행하게 될지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無等鼓

대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다시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 종단’은 사람이려면 누구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호남의 선택’이다. 요즘 도처에서 들려오는, 그리고 누구나 들먹이는 ‘호남의 선택’. 그 실체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6인 가운데 경남 김해 출신인 김두관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모두 영호남 합작으로 정권을 획득했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강력 한 영남 후보’라는 전략을 통해 민주당 정권을

호남의 선택

서 자격을 갖춘 후보를 먼저 선택하고, 그 후보가 승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호남이 ‘능동적으로 정권을 창출해 가는 주체가 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표만 몰아주는 객체로 전락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2개월쯤 뒤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그 후보가 호남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인물인지, 그저 본선에서 이길 만해서 선택한 인물인지에 따라 호남의 미래도 바뀔 수밖에 없을 터이다. 호남의 선택이 금급해진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기 고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정책국장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의료원 설립 예정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시융합지구 내로 결정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 지킴이가 될 공공의료원 설립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의료원 부지 발표 후 여러 시민들과 의료 전문가들은 “시에서 광주시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등 응원과 칭찬을 주셨다. 그동안 의료원을 이용할 시민의 입장에서 부지를 검토하셨던 실무 직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칭찬이었지만, 다른 의미로는 시민을 위한 의료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이기도 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의 의료 환경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닌에도 매년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지방 의료원을 꼭 설립해야만 하느냐’는 등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광주시 공공의료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의견이 아니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히려 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된다. 우리 시 공공 의료기관은 민간 의료기관의 우수성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으로, 감염병 등 공공의료 위기 상황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연방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